

트럼프 “북미회담 11월”

美 중간선거 이후 개최
개최 장소 3~4곳 물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 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 장소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판문점과 평양, 위성 턴, 그리고 유럽의 제3국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가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당국자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환상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

/연합뉴스

이었지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 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해 꽤 근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각각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세부 합의)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가 3~4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힘에 따라 역사적인 2차 핵담판이 열릴 장소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호 기자 bada@

유영민 “구글 조세회피 범정부 조사”

(과기부 장관)

과기부 국감

통신망 사용료·세금 회피 등 글로벌 ICT기업 역차별 지적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
네거티브로 전환 주장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 ICT기업이 생체정보 저장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통신망 사용료나 조세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글로벌 ICT 기업 세금 회피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 협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협동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글로벌 ICT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료 문제에서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벌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

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 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생체정보 분야에서 이뤄진 역차별도 지적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 보이스마치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구글홈 서비스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자 음성 원본을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구글이 원본형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때문에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국내기업만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련사업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통위와 진흥하는 과기부의 엇박자도 지적됐다. AI기술개발을 둘러싸고 방통위는 바이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기부는 관련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초범도 엄중처벌해야”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음주운전 국민청원 답변
재벌률 높아…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 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벌률이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벌률이 45%, 3회 이상 재벌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특히 재벌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벌방지 기관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승호 기자

정유섭 의원, 국감 자료

수수료 최대 30%p 높아
작년 해외명품 매출 3조
“국내 中企 협상력 약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약정수수료 기준)를 해외 명품 브랜드보다 최대 30% 포인트(p) 높게 받는 등 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은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3조

〈백화점 3사의 매출 하위 10위 브랜드 매출 및 수수료〉 단위:백만원

구분	연간매출액	매출이익액	실질수수료	최고수수료
롯데	140,803	34,413	24.4%	37% 아동 유아/완구
신세계	460	105	22.8%	38% 남성의류
현대	9,324	1,812	19.4%	39% 아동/유아, 잡화, 진/유니섹스
합계	150,588	36,331	24.1%	

/자료=정유섭 의원실

12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전인 2015년의 2조6577억원보다 17.6%나 급증한 규모다.

백화점 3사의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전체 순매출액 6조3194억 원의 49.4%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해외명품 브랜드의 임차 수수료는 지난해 4645억원으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였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

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p 낮게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 나 높았다.

약정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는 최대 39%인 반면 해외명품 브랜드는 최저 9%로 무려 30p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하기 보단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해외명품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공정위에서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구글 IoT검색 ‘쇼단’ 통해 국내 CCTV 줄줄 샌다

송희경 의원 국감 자료

‘해커들의 놀이터’로 불려

사물인터넷(IoT)검색엔진 ‘쇼단(shodan.io)’에 국내 IoT 기기 취약점 정보가 대량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단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보에는 시스템상 허점 등 취약점도 포함해 해커들이 공격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쇼단은 ‘어둠의 구글’,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쇼단에

서 가장 인기 많은 필터인 ‘webcam(웹캠)’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

에서 404개가 검색돼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검색 건수는 1140 개 검색돼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비밀번호 조작 설정 돼 있지 않은 카메라들은 별도의 해킹과정 없이 바로 접근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건수는 현재(을 상반기 기준)까지 총 962건으로, 최근 3년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보안과 물리적 보안을 융합한 보안 대책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에 보다 정확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쇼단에 노출되고 있는 국내 IoT 기기 취약점을 인지 및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